

野, 통합엔 한목소리...해법은 제각각

새정치 비주류 “천정배·안철수와 연대 논의”

주류 “신당 세력 실체 갖춰야 협상...시기상조”

안철수-신당 추진과 통합 여부 오리무중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통합·연대 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졌다.

내년 총선에서의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는 사실상 야권 참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선거 전에 여야의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지상과제다. 하지만, 야권 통합 및 연대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방법론을 놓고 계파별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비주류 진영에서는 천 의원은 물론 안 전 대표와도 즉각 통합·연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승용 의원은 15일 “분열은 공멸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당 밖의 안철수, 천정배, 박준선 의원 등과 통합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 등 당 내 주류 진영의 일선 후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내년 총선 전에 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표 등 주류 진영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주류 진영에서는 통합의 방법론으로 문 대표 등 현재의 지도부 사퇴와 함께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 등 주류 진영에서 현재 제 유지를 고수한다면 당내 갈등이 더욱

고조되면서 통합의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류 진영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통합이나 연대를 논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실적으로 당 밖의 신당 세력들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어야 통합 논의에 나설 수 있으며 지금은 문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추스를 때라는 것이다.

주류 핵심 인사는 “단일 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무리 있어야 한다”며 “신당 세력이 실제적 모습을 갖추어 통합이나 연대의 협상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야권 통합 논의는 1월 중순에나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새정치연합의 내부 사태가 정리되어야 하며 안철수, 천정배, 박준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신당 세력간의 통합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의 통합 논의에 앞서 신당

추진 세력 간의 자체적인 통합이 잘 이뤄질 수 있는지 미지수다. 지금껏 박준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통합 신당을 추진하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천정배 의원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과 신당 추진 세력과의 통합 여부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안개 국면이지만 야권 분열은 총선 필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야권 통합의 움직임은 꾸준히 추진될 것이며, 실패한다면 내년 총선 직전 최소한 선거 연대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의 통합은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연합 주류 진영의 결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만행이 가득한 내러놓지 않는다면 가족의 재결합이나 형제간의 신의 회복은 곧 건너가면서 내년 총선 야권의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회전’ 국회

선거구 확정 본회의 개최 못해...野 불참속 상임위 파행

국회는 15일 기획재정부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 상임위가 야당의 불참 속에 파행 운영됐다. 특히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을 위해 이날 오후에 개의하기로 했던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 여파로 혼돈에 빠지면서 국회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안건도 정하지 못한 채 야에 공전했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상정 여부가 쟁점인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이 10여 분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 회의는 여야 간사(간)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원샷법을 논의하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중단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외교통일위와 정보위 전체회의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회의’로 열리면서 역시 파행했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외통위와 정보위에서 각각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연발 이 전에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준호 의원은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간 지도부와 의통위 간사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북한 인권법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새정치연합 법안소위원회 문병호 의원이 안 의원을 따라 탈당할 계획을 밝힌 점을 언급, “문 의원이 탈당하면 정보위를 7대5로 만들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은 상임위에서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심의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당의 북한인권법 협의체 구성 주장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거의 모든 상임위가 파행 또는 공전하는 가운데 환경노동위만 전체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어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오후에는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중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사산재법) 개정안을 우선 논의했다.

산재법 개정안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여야의 이견이 가장 적은 법안으로,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 등 재해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범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새정치연합이 처리를 원하는 노동조합법·정년고용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거구 확정 또 결렬

정의화 의장 “오늘 직권상정 특단의 조치 발표”

선거구 확정 기준 논의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타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확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무산됐으며,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위한 결정이 난 현행 선거구 체제하에서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야는 확정안 합의 불발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지 않기로 해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정개특위 활동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내게 됐다.

더욱이 국회가 연말까지도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하면 현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되며, 예비후보들의 자격도 박탈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정의화 의장은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사태를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이른바 ‘늦어도 16일에는 선거구 확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확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 기일은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인정하는 연발이 되겠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구 확정안과 ‘이병석 중재안’ 등 3가지 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총선 입후보자 등록 시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5일, 광주 남구 월산동 선거관리위원회 접수창구에 한 입후보자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 20곳의 선거구에 100여명의 입후보 예정자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지도부 교체 공감...탈당엔 신중

새정치 호남의원들 회동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호남 의원들은 지난 14일 밤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하고 현재의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하루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탈당 결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 의원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따른 호남민심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

김성곤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호남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

고 대안을 빨리 보여줘야 한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었다”며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 이탈하는 의원들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선거 등을 감안해 문 대표 없이 선거를 치르자는 건 아니다. 문 대표가 당장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에 대한 수도권 의원들의 우려도 심분 공감한다”며 “문 대표만으로는 되지 않으니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 등 대다수 의원은 “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며 사퇴론을 거듭 제기한 반면 강기정 의원 등 일부는 문 대표에게 시간을 조금 더 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승용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그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며 “탈당 문제는 최후의 선택이며, 호남 의원들의 개별적 탈당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표에게 명분과 기회를 줘서 사퇴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 사퇴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강기정·강동원·김동철·김성곤·김성주·김승남·김영록·박민수·박지원·박해자·신정훈·이운석·이춘석·임내현·유성열·주승용·전정희·장병완·황주홍 의원 등 모두 19명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경제·국민’

새정치 당명 ‘새정치’ 없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전 국민 대상 당명 공모를 마치고 당명 후보자 선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당명 후보작은 3000여 개에 달한다. 공모 된 당명 중에는 지난 13일 전격 탈당한 안철수 의원의 상징어인 ‘새정치’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이 가운데 30개 정도를 1차 후보작으로 추린 뒤 서너 개로 압축할 계획이다. 당명 중에는 ‘민주’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단어가 ‘경제’, ‘국민’ 등의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